

희망퇴직에 비핵심사업 매각… 신세계·롯데 경영재편 분주

유통가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속도 주요 계열사 줄줄이 조직 재정비 이마트, 올해만 두 차례 희망퇴직 롯데, 비핵심 사업 매각도 본격화

유통업계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신세계와 롯데를 중심으로 자회사들의 희망퇴직과 비핵심 사업 정리가 잇따르며 경영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희망퇴직과 관련된 구조조정은 대부분 신세계와 롯데그룹의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올해만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마트는 지난 3 월 창사 이래 첫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에 이어, 지난 6일부터 두 번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마트 사내 게시판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자 (2010년 1월 1일 이전 입사), 밴드4(대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들이 시장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경영 효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력 감축은 두 그룹이 유통 시장 전반에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 위축 직격타를 받은 결과에 따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신세계디에프의 경우는 희망 퇴직자들에게 괜찮은 조건으로 최대한의 퇴직 예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려 매출이 상승되는 게 결국 중요하다. 기업 전반이 어려운 만큼 경기가 살아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 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s4187@metroseoul.co.kr

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자(2015년 1월 1일 이전 입사)다.

연이은 희망퇴직 단행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실제, 이마트는 올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겹치며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마트가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 해 이뤄진 신세계 그룹 자회사들의 희망퇴직 접수는 대부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됐다.

앞서 신세계 그룹 자회사인 SSG닷컴과 G마켓은 모두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지난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올 한 해 동안 신세계그룹 주요 유통 자회사들이 줄줄이 사상 첫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롯데도 사정은 비슷하다. 롯데그룹의 롯데온 역시 지난 6월 근속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범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 8월에 만 43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인력 감소책에 더해 심지어 롯데는 비핵심 사업 매각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6일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을 홍콩계 사모펀드 기업 아페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1조 6000억 원에 넘겼다. 매각 소식을 알리면서 롯데는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구조조정과 매각이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그룹의 주요 자회사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내 발표… 유동성 무제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긴급 거시경제간담회’ 주식밸류업 펀드 3000억 추가조성

기획재정부가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이달 중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해외 자금의 이탈 가속화 차단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상황을 방지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드러내 보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환·외화자금시장은 필요시 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조속히 관계 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

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밸류업 펀드 중 3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며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에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

다.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도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최 부총리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하루(7일)를 제외하고 이날까지 비상회의를 총 6번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의장에게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제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 파견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모두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예상 은퇴 68세, 실제는 63세… 가구 절반 이상 ‘노후준비 미흡’

가구 자산 5.4억… 전년비 2.5% ↑
순자산 10억 이상인 가구 10.9%
은퇴 후 적정 생활비 336만원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순자산이 3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주가 예상한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로 은퇴시기는 예상보다 5.5년 빨랐다.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구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9128만 원으로 같은 기간 0.6% 줄었다. 이로 인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으로 3.1% 늘었다.

◆ 순자산, 상위 40% 늘고, 하위 60% 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자산이 3억 원 미만인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에 달했다.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29.2%, 1억~2억 원 미만인 가구는 15.5%, 순자산이 3억 원 미만인 가구는 56.9%를 차지했다.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10.9%였다.

한은 관계자는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줄었다”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0.6%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별로 나눠보면 상위 20% 인(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0억 3252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늘었다.

반면 하위 60% 이하(1~3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모두 감소했다.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순자산은 1억 4974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 감소했고, 하위 40%에 속하는 2분위의 순자산은 2억 3742만 원으로 같은 기간 1.6% 줄었다.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는 3억 3722만 원으로 2.3% 감소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하위 60%(1~3분위)인 가구는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예금보다 주식 투자비중 ↑

가구주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가장 많이 택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53.3%로 1년 전과 비교해 2.9%p 늘었다. 반면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구입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가구주는 2023년 23.9%에서 2024년 22.7%로 1.2%p 감소했다.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가구주는 예금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렸다. 예금 투자비중은 2023년 88.8%에서 2024년 87.3%로 1.5%p 줄었고, 주식은 같은 기간 8.7%에서 9.8%로 1.1%p 늘었다.

◆ 은퇴 후 적정 생활비 336만원…“준비부족”

우리나라 가구 중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로, 은퇴 연령은 68.3세로 예상했다.

이들 가구는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적정생활비가 336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1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인 반면(전혀) 잘 되어있지 않다 비율은 52.5%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은퇴나이는 62.8세로 예상보다 5.5년 빠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활비를 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29.5%)과 공적 수혜금(31.9%)에 의존했다. 나머지는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24.3%)으로 채웠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개인저축액과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다. 은퇴 예상 나이보다 실제 은퇴나이가 빨라지고,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